北 5개시설 폐쇄·봉인 상태 감시

IAEA 감시단 6~8명선 될 듯…12~14일께 입북

마이니치 "北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가능성"

북핵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상태를 감시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단 규모가 6~8명이 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또 이들 감시·검증단의 역할은 영변 5MW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등 북한과 IAEA가 폐쇄 대상으로 합의한 5개 시설의 폐쇄·봉인 상태를 감시하는 것으로 국한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IAEA측이 오는 9일 특별이사회를 거쳐 12~14일께 6~8명 규모의 감시.검증단을 북한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시·검증단의 역할은 5개 폐쇄대상 시설의 상태를 감시하는 것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IAEA 실무대표단은 최근 방북 협의에서 ▲5MW 흑연감속로(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생산시설 ▲영변 50MW 원자로 ▲태천 200MW 원자로 등 5개 시설을 폐쇄 대상으로 정하는데 북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 영변에 있는 핵연료봉 저장시설에 사용후 핵연료봉이 하나도 보관돼 있지 않은 것을 최근 북한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올리 하이노넨 사무부총장이 확인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3일 IAEA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이와 관련, 북한이 총 1만6천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핵연료봉 저장시설 이외의 곳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후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한 봉인을 풀고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시설로 이전, 2003년 5월 재처리를 끝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한 민간연구소는 8천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해 핵무기 4~5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함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었다.

中 외교부장-김정일 위원장 전격 면담

"2·13합의 이행 등 공동 노력"

북한을 방문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전격 면담, 북한 영변핵 폐쇄 조치와 6자회담 재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 부장이 북한측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2·13 합의'에 따른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북한측과 협상을 통해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 소식통들은 "양 부장이 이번 방북 기간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외교수장 자격으로 차기 6자회담 재개 일정을 확정하는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이킹이 돌아왔다"

11세기 바이킹이 타고 다니던 선박이 복원돼 덴마크에서 아일랜드의 더블린까지 항해에 나섰다. 이 바이킹 배는 1050~1060년 앵글로색슨족과 노르만족 간의 전투 당시 동원된 기종으로 11세기 말 침몰했으나 1962년 로스킬레 협만 해저에서 군함에 의해 발견, 복원됐다. 항해 애호가와 역사학자 65명을 태운 가로 3.8m, 세로 30m, 무게 25t의 이 배는 1일 로스킬레항을 출발했으며 다음달 15일 더블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군대 위안부 피해여성 17명 생존"

中 첫 조사보고서 발표…1947년까지 위안부 제도 지속

중국이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보고서를 냈다.

신화통신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사실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3월까지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산시, 하이난, 윈난성 등을 중점 조사해 산시성에 당시 위안부로 일했던 피해여성 16명, 하이난성에서 1명 등 모두 17명이 아직 생존해있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일본군에 붙잡혀 군영내에서 혹은 군영에서 가까운 건물내에서 성적 학대를 받았으며 당시 이들의 나이는 적게는 12세, 많게는 21세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위원회는 일본군이 민간회관이나 주택, 임시 가건물 뿐 아니라 윈난성에서는 사당을 점거해 위안소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일본이 1945년 패전한 후 중국에 잔류한 일본군이 국민당 무장부대에 편입되면서 위안부제도가 그대로 답습됐다고 밝혔다.

일본군이 만든 위안부 제도는 최소 1947년까지 지속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 캉젠(康健)은 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해 중국이 처음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상세한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상하이=연합뉴스

미-러 정상 'MD 구축' 이견 노출

푸틴 "유럽국가 참여 확대" 등 기습 제안

"낚시와 랍스터 식사가 험난한 외교문제 논의로 이어졌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일 메인주 케네벙크포트 정상회담을 외신들은 이렇게 묘사했다.

외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을 부시가의 케네벙크포트 별장으로 초청한 부시 대통령 부자는 시종 극진한 환대를 베풀며 우의를 다지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틀째 회담이 열린 이날도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모는 보트에 푸틴과 나란히 올라 낚시를 즐기고, 랍스터 점심을 함께하는 등 다정한 친구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회담이 끝난 뒤에도 두 정상은 셔츠 차림으로 잔디밭에 나란히 서서 대서양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치밀하고 엄격한 외교적 관례를 뛰어넘는 두 정상들의 파격적인 '랍스터 정상회담'도 핵심 현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측과 첨예하게 대립해온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과 관련해 보다 많은 유럽국가들을 참여시키고 러시아 남부의 첨단 레이더 기지까지 활용하자고 기습 제안하며, 부시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또 러시아 남부 아마비르 기지의 첨단 레이더 시설들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활용하고, 모스크바와 브뤼셀에 정보 공유센터를 운용할 경우 미국과 러시아관계는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유럽, 즉 체코와 폴란드에 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이 "아주 건설적이고 과감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체코와 폴란드는 이 시스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미 메인주 케네벙크포트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케네벙크포트AFP=연합뉴스

"한국 학생들에겐 영어가 전부"

WP, 한국내 '영어 광풍' 소개

"오늘날 한국에선 영어를 마스터하는 것만큼 미래를 보장하는 게 없다"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2일 영어교육을 위해 자녀들을 조기 유학시키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영어태교'를 시키는 등 영어 교육에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는 한국의 영어교육 광풍을 소개했다.

하루동안 영어 단어 600개를 외우고, 10페이지의 SSAT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며 영어시험을 치러야 하는 김민규 학생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트는 "오늘날 한국에선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만큼 미래를 보장하는 게 없다"면서 이로 인해 최근 한국에선 경제가 성장해 부(富)가 쌓이고 여기에 유교식 향학열이 합쳐지면서 이른바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이나 유학에 나서는 '교육 엑서더스'가 생겨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해 한국에서 초.중.고생 2만4천명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는 지난 2001년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美 원폭 당연" 발언 日 규마 방위상 사임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를 당연시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본의 규마 후미오(66) 방위상이 3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 수리됐다.

규마 방위상은 지난 주말 강연에서의 발언이 파문을 빚자 발언을 철회하며 사과했으나 야당측이 일제히 파면을 요구하는 등 비난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오는 29일 참의원 선거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인책 사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의 후임에는 고이케 유리코(55·사진)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 보좌관이 내정됐다. /도쿄=연합뉴스